

1장

세계금융위기 이후 국제 군사안보질서 변화

— 미국의 대응과 안보적 함의

이상현

서론

오늘날 글로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변화는 국제 군사안보질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국제체제는 국제관계의 행위자 및 지역 간 힘의 배분 변화를 목도하고 있다. 파리드 자카리아(Fareed Zakaria)는 21세기 국제 질서의 변화를 이른바 ‘나머지의 부상’ (the rise of the rest)으로 표현한다(Zakaria 2008). 이는 그 동안 경제적으로 침체해 있던 중국, 인도 등 거대국가들이 세계화의 영향으로 급격한 경제성장을 달성하면서 국제사회의 주요 행위자로 부상함에 따라 국제질서에서 미국 패권이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현상을 말한다. 정확히 말하면 미국의 쇠퇴라기보다는 중국과 인도 등 나머지 국가들의 부상이고, 그 결과 국제질서는 이제 ‘포스트 아메리카 시대’ (Post-Americanism)로 전환하는 중이다.

미국 국가정보위원회(U.S.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NIC)의 세계질서 전망 보고서인 <글로벌 트렌드 2025>(Global Trends 2025)에 따르면, 2025년까지 국제질서는 더욱 복잡적으로 변화할 것이며, 미국은 여전히 초강대국이겠지만 지금보다는 ‘덜 지배적인 국가’로 변모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2025년경 국제질서는 중국, 인도, 러시아 등 신흥 행위자의 등장과 함께 세계화로 인한 경제발전, 인

구 증가, 지역적 발전 격차 등으로 인해 더욱 다극화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초국가적 안보 어젠다가 등장하는데, 식량, 에너지, 물 등이 고도의 신 전략자원으로 등장하면서 이를 둘러싼 각축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기후변화, 신 기술, 에너지 배분 등을 둘러싼 대립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테러, 국제갈등 및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확산은 여전히 중요한 국제안보의 문제로 남을 것이고, 세계화에 따른 양극화의 결과 테러조직은 존속할 것이며, 첨단기술의 손쉬운 획득으로 이들의 테러역량도 강화될 것이다. 하지만 이념적 대결은 사라지고 세계화의 후유증과 글로벌 세력판도 변화가 주된 갈등의 원인이 될 것이다(NIC 2008).

글로벌 질서의 미래에 관한 여러 분석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바로 미국 패권의 상대적 약화와 중국의 부상이다. 자료의 출처와 추계 방식은 다르지만 대체로 여러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국제질서에서 미국의 비중은 서서히 줄어드는 반면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부상국들의 약진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말한다. 골드만삭스(Goldman Sachs)의 추정에 의하면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총량으로 볼 때 대체로 2030년경이면 중국의 경제규모가 미국을 추월해 세계 1위로 등극할 전망이다(Goldman Sachs 2007). 중국의 국내총생산은 2010년 말로 이미 일본을 추월해 세계 2위에 올랐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미국의 패권적 지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된다. 한 편에서는 미국 패권의 쇠퇴가 논의되면서도 미국을 빼고는 국제질서를 논할 수 없다는 시각도 건재하다. 독일 시사주간지 <디 차이트>(Die Zeit)의 발행인 요제프 요페(Josef Joffe)는 <포린어페어즈>(Foreign Affairs) 기고문에서 미국의 패권 쇠퇴설을 10년마다 되풀이되는 근거 없는 유행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미국의 힘과 사명감을 대신할 수 있는 나라가 없다는 현실에 변함이 없다며 이런 미국을 '디폴트 파워'(default power)라 규정했다. 즉 미국은 국제질서의 기본축인 만큼 미국을 빼놓고는 아무 것도 논할 수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에 따르면 2008년 미국은 국방비로 6,070억 달러를 썼다. 전 세계 국방비의 약 40퍼센트에 해당하는 이 액수는 2-10위 국가들의 국방비를 다 합친 것(4,767억 달러)보다 많다. 요페는 중국의 부상이 미국을 위협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무엇보다 중국은 부유해지기 전에 늙어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엔 “세계인구 전망”에 따르면 중국의 중위연령(인구를 일렬로 세웠을 때 정가운데 위치한 사람 나이)은 2005년 현재 33세에서 2050년 45세로 급격히 높아질 전망이다. 반면 미국의 중위연령은 2050년에 41세로 강대국 중 가장 젊어질 것으로 예측된다(Joffe 2009). 거기에도 각종 소프트파워(soft power)까지 감안하면 중국이 미국을 추월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이러한 글로벌 차원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향후 국제 군사안보질서의 유형과 미국의 대응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이하에서는 세계금융위기 이후 국제질서의 성격 변화, 군사안보 위협 형태의 변화, 그리고 중국의 급부상과 군사현 대화에 따른 미국의 대응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기로 한다.

21세기 군사안보 위협의 변화

탈냉전, 9·11, 세계금융위기 이후까지 전반적인 국제안보환경의 변화에서 핵심은 주요 행위자 간의 힘의 변화, 전쟁 양상의 변화, 경제구조의 변화, 지역통합으로 인한 주요 행위자의 등장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나머지의 부상’과 결부된 복합적 국제질서, 다중심·무중심 네트워크형 국제질서의 등장은 군사안보 위협의 형태와 대응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단극(unipolarity), 무극(non-polarity), 그리고 G2시대

세계금융위기는 국제질서의 다극화를 더욱 촉진하고 있다. G7/8 체제는 이제 G20 체제로 확대되었다. 시장이 세계화되면서 경제와 외교를 구분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진다. 금융과 시장은 더 이상 하위정치가 아니라 이미 상위정치(high politics)가 되었다(Burrows and Harris 2009, 35-37). 탈냉전 이후 국제정치 구조는 급격히 변하고 있다. 냉전 종식 후 국제정치 학자들은 미국이 단극의 순간을 맞았다고 진단했다(Krauthammer 1990, 91). 그러한 단극체제는 '순간'(moment)으로 끝나고 국제체제는 새로운 질서로 변하고 있다. 단극시대는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G2시대'로 서서히 이행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제 세계는 무극질서에 들어섰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리처드 하스(Richard Haas)는 21세기 국제질서의 특징을 무극(non-polarity)이라고 규정한다. 그러한 질서는 하나나 둘, 혹은 여러 국가들이 지배하는 질서가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힘을 가진 많은 행위자들로 구성된다. 20세기의 국제질서는 다극체제에서 시작해 양극체제로, 그리고 냉전 종식과 함께 단극체제로 이행해왔다. 하지만 국제체제 속에서 힘의 분포가 분산되면서, 무극체제는 다른 종류의 힘을 가진 여러 중심으로 구성되는 특징을 보인다.

오늘날의 국제질서는 미국 외에도 중국,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인도, 일본, 러시아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외견상 다극체제처럼 보인다. 하지만 현재의 국제질서가 고전적 의미에서 다극체제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여러 개의 힘의 중심이 존재하지만, 그 중 상당수가 국가가 아니라는 점이다. 실상 오늘날 국제체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국민국가가 힘의 독점을 상실했다는 데 있다는 것이 하스의 설명이다. 오늘날 국민국가는 위로는 지역 및 국제적 조직으로부터, 밑으로는 각종 준군사조직으로부터, 그리고 옆으로는 각종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와 기업으로부터 도전받고 있다. 요컨대, 오늘날 국제관계에서 힘은 '여러 곳에, 여러 손에' 분산되어 있

다(Haas 2008).

오늘날 미국의 우위는 다방면에서 도전 받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상대적 약화와 전반적인 반미감정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대신할 라이벌은 등장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여전히 미국과 나머지 국가들의 힘의 격차가 너무 크고, 다른 한편 미국이 적대 연합 결성을 초래할 만큼 다른 나라들의 이익을 위협하지 않는다고 인식되기 때문이다. 또한 오늘날 세계 모든 국가들이 경제활동을 위해 의존해야 하는 물자와 사람, 기술, 투자의 자유로운 흐름을 유지하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핵심적이다. 그런데도 단극체제는 끝났다.

그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는 역사적 요인이다. 국가가 발전하듯이 다른 조직들도 발전한다. 기술과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이들 조직의 부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둘째는 미국의 정책 때문이다. 미국은 전후 질서를 복구하면서 몇 개의 힘의 중심을 구축했는데, 그것이 미국의 힘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킨 원인 중 하나이다. 이라크전쟁처럼 미국의 힘을 지나치게 소진한 '제국주의의 과잉 전개' (imperial overstretch)도 이에 기여했다. 셋째, 국가나 다른 조직의 성장, 혹은 미국 정책의 실패 외에도 세계화의 불가피한 결과이다. 세계화는 이 세상 거의 모든 것 — 이메일, 마약, 온실가스, 상품, 사람, 바이러스, 심지어 무기 — 의 탈국경 흐름을 양과 속도 면에서 크게 팽창시켰다.

무극체제의 속성은 새로운 위협요인과 취약성을 낳고 있다. 이란이나 북한 같은 핵확산 사례, 에너지, 테러리즘 등이 대표적 요인이다. 이러한 무극의 시대에 국제정치질서의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네트워크 시대의 국제질서는 강대국 위주의 현실주의 정치 시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양상들을 내포하고 있다.

국제질서의 변화를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적 시각이 있다. 우선 전통적 국제정치 주류 이론인 현실주의의 입장, 즉 구조적 현실주의와 패권안정이론에서 국가들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국가 간 힘의 배분 상태다.

국제제도와 레짐은 강대국 간 세력균형의 부산물로서, 국제레짐의 형성은 패권의 존재 유무에 달려있다. 절대적으로 우월한 힘을 갖고 있는 패권국이 존재하는 단극체제에서 국제레짐은 형성되고 유지되지만, 그 패권국이 쇠퇴하면 국제레짐도 쇠퇴하게 된다. 따라서 패권국은 소위 ‘안정자’(stabilizer)로서 세계경제체제의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Kindleberger 1973, 305).

한편, 제도주의자들은 국제정치의 구조에 집중하는 패권안정이론과는 달리 국제레짐이 제공하는 긍정적 기능과 효과를 강조한다. 이들은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국가들이 제도적 효용을 얻기 위해 국제레짐을 형성하고 유지한다는 기능주의적 접근법을 취한다(Keohane 2005). 따라서 다자주의의 특정 형태보다는 국가 간 협력을 저해하는 거래비용과 정보비용을 감소시키는 데에서 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한다. 즉 국제제도의 형성 주체는 공통의 이익을 공유한 여러 국가들이다. 이들은 국가들의 무임승차로 인한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제제도를 창출한다. 국제제도 창설을 위하여 국제협력에 동참하는 국가들의 숫자가 임계점을 넘기만 하면 국제제도는 형성될 수 있다. 이 임계점은 소수 국가의 연합이나 패권국의 참여로 충족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제도는 주요국가 간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패권국이 아닌 국가들의 협력으로도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 또한 일단 형성된 국제제도는 이후 국가 행위에 영향을 미치며 국제협력이 지속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네트워크 권력론 시각은 21세기 국제질서의 새로운 속성인 네트워크화에 초점을 맞춘다. 네트워크는 “이로운 협력을 가능케 하도록 서로 연결된 행위자들의 집합”으로 정의된다(Grewal 2003, 89-98; 2005, 128-144; 2008). 이때 네트워크의 중심 요소는 표준(standard)이다. 표준은 한 네트워크에 속하는 구성원을 서로 연결하는 특정 방식으로서, 구성원 간 협력을 촉진하는 공유된 규범 또는 관행을 의미한다. 네트워크 권력은 특정 네트워

크의 표준이 그 네트워크 구성원 또는 비구성원에 대해 미치는 영향력이다.

이 네트워크 권력의 크기는 세 가지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 먼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숫자이다. 네트워크 효과는 표준을 공유하는 행위자, 즉 구성원이 많을수록 크다. 동일한 표준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 간의 협력이 가능해짐에 따라 그 네트워크가 더욱 매력적이 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 네트워크 권력 결정 요인은 그 네트워크가 얼마나 바람직한가(desirability)이다. 이것은 각 네트워크가 표방하는 목적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되는가의 문제이다. 특정 목적 달성에 효율적인 네트워크는 그것의 내생적 가치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국가들의 신규 가입을 자극하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중요성(significance)이다. 어떤 표준이나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강력한 국가들을 구성원으로 할 경우 외생적 네트워크 효과가 커진다. 즉 그 네트워크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약소국들은 그 네트워크의 표준을 수용하거나 네트워크로부터 배제되는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선택에 직면하게 된다. 강대국으로 구성된 네트워크가 갖는 권력적 측면이다. 결론적으로, 네트워크는 특정 표준 또는 규칙을 공유하는 행위자들 간의 연결 상태를 의미하며, 네트워크 권력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국가가 많을수록, 그 네트워크에 가입함으로써 얻는 효용이 클수록, 그리고 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비중과 중요성이 클수록 증대한다(김치옥 2010).

한편, 네트워크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무엇보다도 네트워크 참여 여부와 네트워크 내에서의 위치에 따라 불균등하게 배분된다. 여기서 최대의 수혜자는 당연히 자신의 표준을 매개로 하는 지배적인 네트워크를 짜는 데 성공한 국가일 것이다. 그 다음 수혜자는 그 네트워크에서 가급적 중심에 가까운 위치를 점하는 국가가 될 것이다. 반대로 가장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국가는 해당 네트워크에 참여하지 않거나 배제된 국가들이다(Grewal 2005, 136-137). 네트워크 시대의 이러한 속성은 주요 국제안보 문제의 해결 방향에서도 중요

한 시사점을 준다.

국제관계에서 네트워크 권력론이 등장한 것은 오늘날 국제질서의 성격 자체가 기존 주류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여러 측면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글로벌 차원에서는 이미 네트워크 시대에 부합하는 협력 네트워크와 연대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이다. G20 정상회의,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 등은 오늘날 초국가적 문제들을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해결하려는 대표적 노력들이다. 이러한 글로벌 차원의 노력에 비해, 동북아 차원의 협력 네트워크는 아직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예를 들면 아세안지역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 동아시아정상회의(East Asia Summit: EAS), 동아시아공동체 논의, 북핵 6자회담 등이 있으나, 본격적인 협력 네트워크라 부르기에는 미흡하고, 안보문제를 다루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동북아 협력 네트워크를 보다 확대하고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21세기는 네트워크 시대이다. 21세기 국제질서는 정보혁명과 세계화의 심화로 네트워크에 기반한 새로운 복합적 국제질서 출현을 특징으로 한다. 그 결과 국제체제는 더 이상 단일국가들의 체제로 간주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전통적인 주권의 관념은 세계정치의 복잡성을 담아내기에 부적절하다. 갈수록 복잡화되는 세계, 분산되고 다중심적이어서 누구도 혼자 힘으로 지배할 수 없는 질서, 그리고 네트워크화된 질서에서 힘의 원천은 '연결성' (connectivity)이다. 다시 말해 국가를 포함한 국제관계의 다른 행위자들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혹은 얼마나 좋은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활용하는지가 국력의 바탕이다. 이러한 질서 속에서는 다른 행위자들과 가장 많은 연결을 갖는 국가가 중심적 행위자가 되고 글로벌 어젠다 설정에서 주도권을 갖게 된다. 네트워크 시대에 힘은 중요한 연결을 가능한 한 많이 만드는 능력에서 나온다(Slaughter 2009). 이러한 국제질서 속에서는 될 수 있으면 많은 국가들과 양적 질적으로 우수한 네트워크를 자꾸 만들어가야 한다. 네트워크 국제질서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형 외교와 연대를 모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네트워크는 개방된 질서로서 그러한 다양한 네트워크에서 배제될수록 국가의 역량은 제한되고, 폐쇄적인 민족주의적 시각으로는 세계화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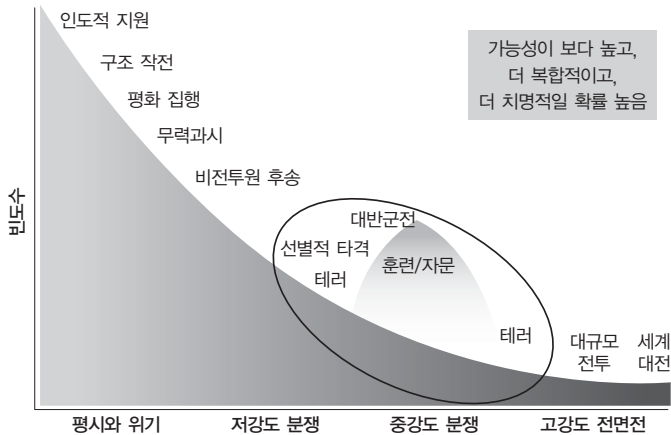
하이브리드 위협

앞에서 지적했듯이 오늘날의 안보환경은 매우 복잡적이다. 글로벌 차원에서 정치, 경제, 군사적 힘의 분산, 새로운 강대국 부상,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비국가 행위자의 영향력 증대 등은 전쟁 양상의 복잡성을 초래하고, 다양한 행위자의 개입, 전통적 비전통적 분쟁의 경계를 허문다. 이러한 복잡적 위협을 흔히 ‘하이브리드’ (hybrid) 위협이라 부른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테러와의 전쟁’은 사실상 전세계적인 장기 비정규전이라고 규정하였다. 그에 의하면 과거에는 전쟁의 양상을 ‘하이엔드’ (high end)와 ‘로엔드’ (low end), 재래전과 비정규전, 혹은 기동전 대 게릴라전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통상적이었다. 하지만 오늘날의 하이브리드 전쟁 상황에서는 전쟁의 유형이 그렇게 분명히 구분되지 않는다. 미래의 전쟁은 과거 전쟁이 흑백으로 구분됐던 것에 비해 다형태, 다변종, 다중심(multimodal, multivariant, multinodal) 양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하이브리드 위협은 광범위한 능력과 위협 유형, 포괄적 스펙트럼이 특징이며, 전면전, 비정규전, 테러 및 범죄활동까지도 포함된다. 미래의 군사안보 위협은 갈수록 전통적 전술과 비정규적 전술의 결합, 전쟁계획과 수행의 분산성, 각종 비국가 행위자들의 혁신적 전쟁기술 구사 등이 특징적인 현상이 될 것이다(Hoffman 2009, 5). 다른 말로 비유하자면 오늘날의 전쟁은 “비정규전의 광기에 정규전의 파괴성이 더해진” 양상으로 전개되고, “마이크로소프트와 마세티(Machete: 정글용 칼) 혹은 스텔스폭격기와 자살폭탄테러가 함께 동원되는” 전쟁이다(Gates 2010).

이런 복잡적 위협에는 단일한 접근법으로 대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이

보유한 모든 국력 요소의 창조적 결합이 요구된다. 이런 이유로 게이즈 장관은 〈포린어페어즈〉 기고문에서 새로운 위협 대처와 전통적 역량 우세를 유지할 필요성 사이의 균형을 강조한 바 있다. 다음 그림에서 보듯이 미래 전쟁 양상의 스펙트럼은 고강도 전면전이나 세계대전 같은 글로벌 전쟁의 빈도나 가능성은 줄어드는 반면 대반군전, 대테러전, 선별적 타격 등 중강도 분쟁이 빈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빈도 면에서는 인도적 지원이나 구조, 구난 같은 평시 위기 상황이 가장 흔히 발생하겠지만 치명도나 복잡성 면에서 중강도 분쟁이 미래의 분쟁 양상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 미래 전쟁 양상의 스펙트럼



* 자료, Hoffman (2009, 6).

한편 2010년 〈4개년국방검토보고서〉(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QDR) 과정을 주도한 미셸 플루노이 미 국방차관은 미국이 당면할 군사적 위협의 근원을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는 해상, 공중, 우주 등 국제체제의 원활한 작동

을 위해 자유로운 접근과 안정이 유지되어야 하는 소위 ‘글로벌 공유재’ (global commons)를 둘러싼 점증하는 긴장이다. 그리고 둘째는 재래전과 비정규전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위협이며, 셋째는 취약하고 실패한 국가들로부터의 위협이다.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미국과 동맹국들이 유의해야 할 두 가지 전략적 추세가 나타난다. 첫째, 미국과 동맹국들의 행동의 자유에 대해 다른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들이 도전하는 역량을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는 진입장벽이 갈수록 낮아질 것이다. 둘째, 신흥 부상국들이 글로벌 공유재의 확고한 보장자인 미국의 역할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중국, 인도, 러시아 등은 그들의 국력과 이익에 부합하는 국제질서와 역할을 요구할 것이다. 때문에 글로벌 공유재를 관리하고 보장하는 미국의 역할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Flournoy 2010). 이런 복합적 안보환경은 군사력을 포함해 국력의 모든 요소를 결합한 ‘국가총체적’ (whole-of-government, whole-of-nation) 방어태세를 요구한다.

이와 같이 변화하는 글로벌 세력판도 속에서 새로운 문제들이 등장함에 따라 국제안보에 대한 국가 위주의 접근보다는 초국가적 접근법의 효용성이 증대된 것이 오늘의 상황이다. 글로벌 테러 네트워크, 대량살상무기 확산, 실패한 국가의 문제 등은 세계화, 정보화 시대의 특성과 결부되어 군사적 수단의 한계, 일국주의적 접근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21세기 네트워크 국제질서에서의 초국가적 문제는 네트워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방법이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미국의 국제 군사활동 위축이 예상되기도 하지만 미국이 당장 국제무대에서 후퇴할 가능성은 아직 단정적으로 예견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국방예산 감축 압박으로 인해 제국적 위상으로부터의 후퇴를 예상하기도 한다. 또한 미국의 위축을 틈탄 나머지 국가들의 군사적 부상 가능성(중국, 러시아, 유럽연합), 혹은 신냉전의 가능성(미·일·호 vs. 상하이 협력기구 국가군, 중국 vs. 일본 패권경쟁, 한·미 vs. 북·중 갈등)이 거론되기도 한다.

미국의 대응

미국 군사전략의 변화는 이미 2004년 새로운 국방전략보고서 이후의 변화에서 예고되고 있다. 당시 보고서는 하드파워(hard power) 위주에서 스마트파워(smart power)로, 전투 위주에서 안정화 및 재건에 중점을 둔 변화를 강조했고, 여러 의미에서 ‘균형’을 강조한 게이트 국방장관의 시각은 럽스펠드 독트린의 ‘충격과 공포’에서 게이트 독트린으로의 변화를 시사한 것이었다. 그 결과는 일방주의에서 국제적 협력, 지역별 맞춤형 협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의 변화였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첫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에는 현재 글로벌 차원에서 진행되는 힘의 분포 변화, 전쟁 양상의 변화, 경제구조의 변화, 지역통합으로 인한 주요 행위자의 등장 등을 주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이 반영되어 있다. 오바마 정부가 처한 국제적 상황은 ‘나머지의 부상’, 복합적이고 다중심·무중심 네트워크형 국제질서 등장 등과 함께 하이브리드 전쟁의 시대를 맞고 있다. 21세기 네트워크 국제질서 하에서의 초국가적 문제는 네트워크적 접근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바마 정부의 인식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안보정책은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The White House 2010).

이번 <국가안보전략>의 키워드는 “국내에서 힘을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질서를 조성한다”(Building at Home, Shaping Abroad)는 것으로 요약된다. <국가안보전략>은 먼저 서문에서 미국의 전략은 국내에서 취하는 정책이 곧 해외에서 힘과 영향력의 원천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고 지적한다. 장기적으로 미국의 안보는 다른 국가들에게 두려움을 주입하는 능력이 아니라 희망을 말하는 능력에서 비롯되며, 미국이 예의와 품위를 가질 때 가장 큰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이번 <국가안보전략>은 오늘날 미국의 안보전략이 성공하려면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고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 현실이란 지구상의 아무리 강한 나라도 혼자 힘으로는 글로벌 차원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미국

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은 미국의 리더십 회복에 우선 초점을 맞춰야 하고, 국내에서 먼저 힘의 원천을 다지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에서 우호적인 국제질서를 조성해야 한다. 그런 인식을 반영해 이번 <국가안보전략>은 미국의 상대적인 영향력 감소를 배경으로 국제협조를 가장 중시하는 정책을 내세웠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수많은 안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다자적 접근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무력의 행사는 때로 필요하지만 전쟁을 택하기 전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국가안보전략>의 중요한 특징은 협상을 통한 관여(engagement), 그리고 대결보다는 설득에 입각한 외교를 중시한다는 점이다. 제임스 존스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번 <국가안보전략>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이번 <국가안보전략>은 미국이 처한 전략적 현실을 있는 그대로(the world as it is today) 대응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오늘날의 급변하는 정세는 국경에 제약 받지 않는 새로운 글로벌 도전 요소들을 담고 있다. 테러리즘과 범죄의 국제 네트워크, 우주와 사이버공간의 위협, 기후변화와 신기술의 파괴력 등은 대표적 도전들이다. 둘째, 새 <국가안보전략>은 포괄적 관여(comprehensive engagement)를 지향한다. 오늘날의 글로벌 도전들은 한 나라의 힘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동맹이나 우방들과의 협력을 포함해 전세계에 걸친 포괄적 관여를 필요로 한다. 셋째,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국제질서의 유지를 강조했다. 원칙을 준수하는 국제체제의 유지, 모든 국가가 권리와 책임을 다하는 질서, 이를 위배하는 국가들은 적절한 대가를 치르는 국제질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넷째, 국력의 모든 요소를 강화하고 통합할 것임을 천명했다. 국가안보를 위해 '국가총체적 접근'(whole-of-government approach)을 강조했는데, 군사력, 외교, 개발지원 역량, 정보, 국토안보 등을 포괄적으로 활용하고, 동맹, 우방, 국제제도도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Jones May/27/2010).

이러한 상황인식에서 2010년 <국가안보전략>은 미국이 추구해야 할 항구적 이익을 안보, 번영, 가치, 국제질서 등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미국과 동맹 및 우방국들의 안보를 확보한다. 테러나 자연재해 등 내부로부터의 각종 위협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한편, 알카에다(Al-Qaeda)와 폭력적 극단주의 분쇄,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사이버 공간의 안보 증진을 추구한다. 둘째, 개방된 국제경제체제 속에서 강력하고 혁신적이며 성장하는 미국의 경제를 통해 번영과 기회를 증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 증대, 과학기술과 혁신의 강조, 지속가능한 성장 등을 목표로 삼았다. 셋째, 미 국내에서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보편적 가치를 존중한다. 이를 위해 미국부터 먼저 민주주의와 인권의 모범을 보이고, 전세계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넷째, 글로벌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들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국제질서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통한 평화, 안보, 기회를 확대한다. 이번 <국가안보전략>은 강력한 동맹, 효율적인 국제제도, 아시아, 중국, 러시아, G20, 브라질 등 21세기 새로운 영향력 중심지와의 협력 강조, 기후변화 등 핵심 글로벌 도전에서의 협력을 내세웠다.

이번 <국가안보전략>이 과거와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보다도 국가안보의 개념을 매우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국가안보전략>에서는 경제, 교육, 에너지, 과학기술, 이민 등 모든 문제들이 국가안보를 위해 고려해야 할 대상으로 등장했다. 국가안보와 국토안보를 통합하여 다루는 점도 새로운 특징이다. 예를 들면 2009년에 오바마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NSC)와 국토안보회의(Homeland Security Council)를 통합했다. 사이버공간의 안보와 기후변화는 처음으로 핵심적 국가이익으로 제시되었다.

오바마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2010년 초부터 발표되기 시작한 <4개년국방검토보고서>, <핵태세검토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 NPR), <탄도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Ballistic Missile Defense Review: BMDR) 등

국방부의 전략방위태세 검토 보고서들과 함께 전체적인 조망이 필요하다. 대체로 2004년 새로운 국방전략보고서 발표 이후 미국의 안보전략은 하드파워 위주에서 스마트파워로, 그리고 전투 위주에서 안정화 및 재건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변해왔다. 럼스펠드 독트린에서 게이트 독트린으로의 변화는 ‘균형’을 유난히 강조한다든지 선제공격과 일방주의를 포기하는 대신 국제협력과 지역별 맞춤형 억지체제를 강조하는 데서도 잘 드러난다. 2010년 <4개년국방검토보고서>는 하이브리드 전쟁, 현재와 미래의 위협 사이에서 미 군사력의 균형, 국방부의 지속적인 개혁, 전진주둔과 순환배치, 현행 전쟁에서의 승리, 편향된 전략의 ‘재균형’(rebalancing) 등을 제기했다.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는 소극적 안전보장(Negative Security Assurance: NSA)을 통한 핵테러 방지와 핵확산 억제,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비확산 의지를 천명했다. 비확산 의지와 함께 신뢰할만한 핵억지력의 유지,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검토회의를 통한 비확산체제의 강화, 그리고 동맹국에 대한 확장억지 제공을 재확인했다. <탄도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에서는 단계적 조절적 접근(Phased Adaptive Approach: PAA), 대규모 지상배치 요격체제에서는 이지스 SM-3 위주로, 그리고 지역 파트너들과의 협력 강화를 천명했다. 폴란드 지상발사 요격미사일 배치 취소, 체코 추적레이더 건설계획 백지화도 그 일환이었다.

이들 보고서에서 드러나는 미국 안보정책의 변화는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를 탈피하는 대신 다자적 협력을 지향하려는 움직임이 엿보인다. 이런 변화는 자연스럽게 외교전략 수단과 대응방식의 유연화로 이어진다. 하이브리드 위협의 대비, 큰 무기체제와 소규모 우발사태 대비 병행, 미래전 중심에서 현존 위협 대비로의 재균형 강조, 핵무기를 줄이는 대신 글로벌 신속타격체제(Prompt Global Strike) 등 재래식 전력으로 보강하는 것이 그러한 예이다. 또한 지역별 맞춤형(regionally tailored) 안보협력이 자주 언급되는데, 이는 미국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역 안보문제에 동맹과 우방의 협력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반영한 것이다.

요컨대, 오바마 정부의 <4개년국방검토보고서>, <핵태세검토보고서>, <탄도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 등은 모두 한 가지 특징을 지니는데, 위협의 유형과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어느 한 가지 수단에 의한 대응보다는 상황과 맥락에 맞는 유연한 대응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그런 면에서 오바마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은 케네디 행정부 시절의 '유연반응전략'과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겠다(이상현 2010, 12-14). 오바마 정부가 이처럼 유연한 대응을 강조한 배경은 앞에서 설명한 무극체제의 속성과 하이브리드 위협이라는 새로운 군사안보 위협의 등장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동시에 오바마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약간의 계산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함으로써 적대국들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면서도 압박을 유지하는 접근법을 취한다. 이번 <국가안보전략>은 군사력의 사용과 관련해 미국을 위협하는 국가나 비국가 행위자의 공격위협에 대비한 선제공격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오바마 대통령이 선제공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도 아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무력의 사용이 때때로 필요하지만 미국은 전쟁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모두 동원할 것이며, 행동에 나섰을 때 생길 수 있는 비용과 그렇지 않았을 때 발생할 비용을 면밀히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세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대응을 규정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귀착된다. 하나는 중국의 부상과 공세적 전환이며, 다른 하나는 미국 국내정치적 요인으로서 국방예산 감축 압박 및 오바마 민주당 정부의 국내정치 어젠다로부터 오는 정치적 제약이다.

중국의 부상과 미중관계

오바마 정부는 아시아를 중시한다. 2009년 11월 버락오바마 미 대통령이 한중 일 순방 중 도쿄 산토리홀에서 행한 연설은 미국의 아시아 복귀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연설에서 그는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국가라고 선언했다. 아시아와 미국은 태평양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태평양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다. 오바마는 이 연설에서 미국은 아시아의 동맹국들을 중시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중국에 대해서는 자국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후 아시아를 향한 미국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미국은 아세안 10개국과 “10+1 정상회의”를 정례화했고,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참여도 공식화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상호 관심사에 관하여 실용적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21 세기의 문제는 어느 국가도 홀로 대처할 수 없고, 미국과 중국이 서로 협력하여 대처할 때에 더욱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을 억지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과의 깊은 관계가 미국과의 양자동맹 약화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Obama 2009).

미국의 대 아시아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중국정책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의 부상이 향후 수년간 미국의 외교에 가장 중대한 도전이 될 것으로 보며, 미중관계가 미국의 가장 중요한 양자관계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한 중국을 대하는 최선의 방법은 중국을 국제체제 속으로 더 깊이 끌어들여 정치, 경제, 환경, 안보 등 전 분야에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다. 미국은 부시 2기 행정부 때 이미 중국을 ‘책임있는 이해당사자’(responsible stakeholder)로 규정한 바 있다(Zoellick 2005). 중국 또한 전면적 소강사회(小康社會)를 달성하기 위해 안정된 주변환경을 필요로 하며, 그 관건이 바로 미국과의 평화로운 관계 설정이라고 보고 있다. 더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발언권 확대를 위해서도 중국은 미국과의 전략적 협조가 자신의 국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 결국 미국의 대중국 정책목표는 중국이 미국과 협조적이고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

를 맺도록 하는 것이며, 글로벌 차원의 이해당사자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중관계를 '진보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그 핵심은 중국을 책임 있는 글로벌 파트너로 인정하고, 현행 국제질서에서 좀 더 큰 지분을 인정하는 것이다(Hachigian et al. 2008).

일각에서는 현재 동아시아에서 세력균형이 안정적이고 미국에 유리한 상황이지만 영향력의 균형(balance of influence)은 서서히 중국 쪽으로 기울어 추세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과의 안보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원하면서도 중국의 부상을 주로 경제적인 이유로 농쳐서는 안 될 기회로 보고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미국의 국익이 침해될 수 있다.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맡아주는 것이 중요하며, 그것이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Frost et al. 2008).

중국의 부상은 다분히 복합적인 측면을 담고있다. 중국인들 스스로는 아직 'G2시대'라는 표현을 거부한다. 중국은 총량적인 경제규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난한 세계 최대의 개발도상국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최근 들어 중국은 스스로가 국제무대에서 책임대국(負責任大國, *fuzeren daguo*)으로 비추어지기를 바라는 속내를 숨기지 않는다. 중국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20년을 전략적 기회기(戰略機遇期)로 보고 이 기간 동안 전면적 소강사회(全面小康社會)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한 경제·사회발전 전략으로는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 균형발전,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과학적 발전관(科學發展觀)과, 도시와 농촌의 민생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조화사회(和諧社會) 건설을 추진한다. 외교전략으로는 국내발전에 전념할 수 있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국제환경 조성과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평화발전(和平發展)을 추진한다. 후진타오 주석이 개혁개방 30주년을 맞아 행한 2008년 12월 연설에서는 당 창건 100주년인 2021년까지 중국 인구 10억명이 높은 수준의

혜택을 누리는 고도의 소강사회(高水平的小康社會)를 건설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에는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화되고 조화로운 현대화된 사회주의 국가(富強民主文明和諧的社會主義現代化國家) 건설을 목표로 언급했다(Hu 2008).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된 외부환경, 특히 미국과의 협력적 관계이다.

중국의 경제발전에서 흔히 방대한 지리적 이점은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지만 필수적인 요소이다. 오늘날 중국은 국경 내부의 통합을 마무리 짓고 이제 외부로 눈을 돌리고 있다. 중국외교는 한 세기 전 미국의 외교만큼 공세적이지만 그 이유는 전혀 다르다. 중국 외교는 전 세계의 5분의 1에 달하는 막대한 인구를 지탱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자원, 전략광물을 확보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Kaplan 2010). 그런 이유로 안정적인 대외관계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미중관계의 전반적인 기조와는 달리 기본적으로 미국은 중국의 급격한 군사현대화 추세를 우려하고 있다. 중국 군사력 강화에 대한 미국의 시각은 중국이 인도양, 서태평양 지역까지 군사전략 영역을 확대하고 있고, 중국과 대만 양안의 경제교류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만에 대한 군사력 우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미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중국의 군사안보 발전 평가 연례보고서>에 반영되어 있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이 지상발사 미사일, 공격용 핵 잠수함 증강, 항공모함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군사 프로젝트의 투명성 결여는 오관과 오해를 초래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2010년 1월 64억 달러 규모의 대만 무기 판매를 결정한 바 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중국은 장기적 전략으로 미국의 태평양함대까지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포함, 대만 영역을 넘어서는 활동 시야를 바탕으로 군사력 증강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보고서는 중국 무기체계와 전개 패턴을 분석한 결과 중국은 이미 군사력 증강을 통해

대만을 넘어서는 비상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과거 중국의 전통적인 군사전략은 일본 오키나와 열도와 베트남 동쪽의 남중국해 일대까지를 염두에 둔 군사적 역량 개발에 초점을 맞췄지만, 중국의 군사전략가들은 활동 범위를 일본 본토와 필리핀, 괌까지 포함한 영토까지 확대시키고 있다고 보고서는 소개했다. 국방부 보고서는 중국이 과거에 비해 군사력 투명성이 약간 나아지긴 했지만 총체적으로 투명성이 결여된 상태이기 때문에 역내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오해와 판단착오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지금 중국 인민해방군은 과거의 낙후된 군대가 아니라 정보화(informatization, 信息化 *xinxihua*)와 기계화(mechanization)에 주력함으로써 첨단 정보기술과 산업기술로 무장한 현대화된 군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것이 미국의 평가이다. 중국의 군사전략은 “신시대 국가군사전략 가이드라인”(新時期國家軍事戰略方針)에 따라 현 시대 전쟁을 “정보화 조건 하의 국지전”으로 규정하고 이의 수행에 적합한 군대를 양성하고 배양하는 데 목적을 둔다. 또한 중국의 군사전략은 전쟁 이외의 군사작전(Military Operations Other Than War: MOOTW, 非戰爭軍事行動), 적극방어(積極防禦, *jiji fangyu*), 넷-전자통합전(網電一體戰, *wangdian yitizhan*) 등 중국이 나름대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2003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중국식 정보전 개념을 심리전, 미디어전, 법률전 등 삼중전법(三種戰法)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 개념은 기타 군사·비군사 작전개념과 병행 사용된다(US DoD 2010a).

미국은 중국이 군사현대화 프로그램 중에서도 접근차단(anti-access) 및 지역거부(area-denial)에 중점을 둔다고 평가한다. 2010년 들어 발표된 오바마 행정부의 <4개년국방검토보고서>는 지역정세와 관련해 전진배치, 재래식 전력, 핵억지 등을 포함하는 ‘지역별 맞춤형 억지체제’(regionally tailored deterrence architecture)를 강조한 바 있다. ‘맞춤형 지역억지’는 단순히 핵 확장억지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핵과 재래식 전력, 정치·외교·경제등 모든 수단을 활용한 포괄적 지원을 강

조한 개념이다. 이러한 지적은 그 동안 미국이 아시아로부터 발을 빼지 않을까 우려해 온 아시아 동맹국들에게는 좋은 메시지이지만, 미중관계 측면에서는 우려의 소지가 있다. 이번 <4개년국방검토보고서>는 동아시아에 대한 미 군사력의 현시가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는 미국이 급부상하는 중국의 군사력 앞에서 물러설 의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2010년 <4개년국방검토보고서>에서 '접근차단' 혹은 '지역거부' 라고 표현된 부분은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유사시 미 군사력의 접근을 거부할 능력을 이미 갖췄다고 보는 인식을 나타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전진현시와 군사력 투사작전에 충분한 해군력을 구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US DoD 2010b).

다음의 [그림 2]에서 보듯이 중국은 자국의 해양방어선을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로 확장하고 있다. 동중국해는 중국과 일본 간에 센카쿠열도(釣魚島·다오위다오)를 두고 영유권 분쟁으로 충돌이 계속되는 지역이다. 최근 센카쿠열도 부근에서 일어난 일본 순시선과 중국 어선 간의 충돌 사고로 양국관계는 극도로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다. 또 남중국해에서는 난사군도나 서사군도의 영유권 및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을 둘러싸고, 베트남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과 중국 간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 해군이 미 해양조사선을 방해하는 사건이 있기도 했다. 여기에도 2010년 3월 중국은 남중국해의 해양 권익을 대만이나 티베트 문제와 같이 주권 영토와 관계되는 '핵심 국가이익'이며, 타협의 여지는 없다고 선언했다.

동·남중국해는 미국의 아시아 방위선과 중국의 해역확대 계획인 열도(列島)선 전략이 만나고 있는 곳이다. 중국은 마오쩌둥(毛澤東) 시대까지 광활한 국토로 적을 끌어들여 싸우는 인민전쟁전략을 채택했으나 1980년대 이후 덩샤오핑(鄧小平)의 지시로 국토 밖에서 적을 맞아 싸우는 적극방어전략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개념에 따라 중국 해군의 방위 범위는 외양(外洋)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활발해지는 중국 해군의 활동은 이러한 전략의

[그림 2] 중국의 제1, 제2 열도(列島)선



* 주. 중국의 군사이론가들은 두 개의 '열도'를 상정하고, 이를 근거로 중국 해양의 지리적인 방어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 자료, US Department of Defense (2010a, 23).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작전해역을 근해와 외양으로 나누고, 근해의 범위는 쿠릴열도를 시작으로 일본에서 대만, 필리핀, 말라카해협에 이르는 '제1열도선'이며, 외양의 범위는 오가사와라, 괌, 사이판, 파푸아뉴기니를 연결하는 '제2열도선'이다. 중국국방대학 전략연구소장 양이(楊毅)가 2010년 8월 7일, "중국의 해양 진출은 필연이며 어떤 포위망도 중국의 해군활동을 방해할 수 없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제1열도선 전략은 완성되었다고 평가된다. 이어서 제2열도선 전략도 2020년을 목표로 군사력을 건설하고 있다(이종환 2010). 미국은 중국의 접근차단 역량이 이미 제2열도선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중국은 적대세력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항모공격용 미사일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바, 현재 중국이 집중하고 있는 대함탄도미사일(Anti-Ship Ballistic

Missile: ASBM) 프로그램에서 핵심은 동평21-D(DF-21D, 서양 분류명칭 CSS-5)이다 (Erickson 2010, 2-4). 이와 병행해 킬로급, 송(宋)급, 위안급, 상급 공격잠수함 전력, 위양 I, II, 소브레메나-II 유도미사일 구축함, FB-7, FB-7A, SU-30 MK2 등 대함공격용 미사일을 장착한 해상공격용 전투기 등을 집중 강화하고 있다(US DoD 2010a, 29-33). 중국은 냉전 끝무렵인 1995년 이후 공격용 전략잠수함 전력의 태평양 배치를 급격히 강화하고 있다. 미 국방부 추산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아시아에서 공격용 잠수함 60척을 포함해 가장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이 보유한 공격용 잠수함의 절반 이상은 최신에 킬로급, 송급 및 위안급 등이다. 이에 비해 미국은 2009년 현재 총 53척의 공격용 전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1987년 102척에서 거의 절반으로 감소한 숫자이다. 미국은 이 중 30척을 태평양에 배치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의 해군력 증강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미국이 이에 대처하지 않으면 태평양에서 미중 간 잠수함 전력의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을 지적하기도 한다. 2006년 <4개년국방검토보고서>에서는 미국 잠수함 전력의 60퍼센트를 태평양에 배치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전략잠수함 숫자를 늘리지 않는 한 태평양에서 미국의 해저 우위는 조만간 중국으로 역전될 전망이다(Eaglen and Rodeback 2010).¹⁾ 중국은 최근 스텔스 기능이 장착된 최신에 잠수함까지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 SCMP) 보도에 따르면 군사전문가들은 이 잠수함이 중국의 첫 스텔스 잠수함일 것으로 추정한다. 이번에 공개된 잠수함은 외형상 디젤-배터리 추진형 위안(元)급 잠수함 개량형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위안급은

1) 잠수함은 보통 디젤추진(SSs, SSKs), 핵추진 공격용(SSNs), 유도미사일(SSGNs), 탄도미사일(SSGNs) 등으로 분류된다. 디젤추진 잠수함은 디젤엔진으로 충전된 전지를 동력으로 잠항하기 때문에 매우 정숙하고 생존성이 높은 반면, 주기적으로 수면에 부상해야 하는 약점이 있다. 공기불필요추진장치(AIP)를 장착한 디젤 잠수함들은 잠항 기간을 더욱 길게 할 수 있다. 핵추진 잠수함은 추진동력은 무한한 반면, 원자로 소음으로 인해 대잠전력에 적발될 가능성이 더 크다. 중국이 아시아에 배치한 60척의 공격용 잠수함 중 여섯 척은 SSN급이고 나머지는 디젤추진 잠수함이다. 반면 미국은 대부분 SSN급이기 때문에 우열을 단순히 수치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길이가 짧고 동체가 통통해 외형상 다른 잠수함과 뚜렷이 구별된다. 특히 소음이 적은 디젤 추진형이어서 스텔스 기능이 적용될 수 있는 최적의 중국 잠수함으로 알려졌다. 위안급 잠수함은 부상하지 않고 물 속에서 디젤엔진을 가동할 수 있는 공기불필요(Air Dependent Propulsion: AIP) 시스템을 적용해 핵추진 잠수함처럼 수중작전 기간이 길다(〈중앙일보〉 2010/10/04).

미국은 중국이 군사력 현대화를 바탕으로 더욱 도발적인 태도로 변하는 것을 우려한다. 예를 들면 천안함사태 이후 한미 연합훈련을 반대하면서 중국이 황해를 자신의 ‘근해’(coastal waters)라고 규정한 것이나, 동중국해를 중국의 ‘핵심이익’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미국은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CSIS) 퍼시픽포럼의 랄프 코사(Ralph Cossa) 회장은 한미 연합훈련이 순전히 대북 메시지용으로 계획되었지만, 중국의 불필요한 과잉반응 때문에 결국 항모가 동원되고 서해상 훈련까지 고려되었다고 지적한다. 다시 말해 애초에 한미 양국은 중국을 염두에 두지 않았지만 중국이 자신의 ‘근해’에 외국 항모가 진입하는 것을 “결단코 반대한다”(堅決反對)는 입장을 표명한 후 미국으로서는 중국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으로 비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서해상 훈련을 결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Cossa 2010).

뿐만 아니다. 지난 9월 7일 다오위다오 부근 영해에서 일본 순시선을 들이받은 혐의로 중국어선 선장이 구속되면서 중일관계는 일촉즉발의 벼랑끝으로 내몰렸다. 일본의 관할 검찰청인 오키나와(沖縄)현 나하(那覇)지검은 중국인 선장을 ‘처분보류’(기소유예)했는데, 이는 사실상 일본이 중국의 압박에 백기 투항한 셈이다. 세계 2위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주변 국가를 힘으로 굴복시키는 ‘힘의 외교’가 승리를 거둔 것이다. 일본 정부로 하여금 백기를 들게 한 결정타는 중국당국의 희토류(稀土類) 수출금지 조치였다. 희토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자동차, 액정패널 등 일본이 자랑하는 첨단 제조업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핵

심 소재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97퍼센트를 차지한다. 가뜰이나 희토류 수출량을 줄여온 중국이 최대 수입국인 일본에 대해 사실상의 금수조치까지 취할 경우 일본 제조업의 생명선은 사실상 끊기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최근의 사례들은 중국 외교가 더 이상 ‘도광양晦’(船光養晦)의 틀에 갇혀 있지는 않을 것임을 강하게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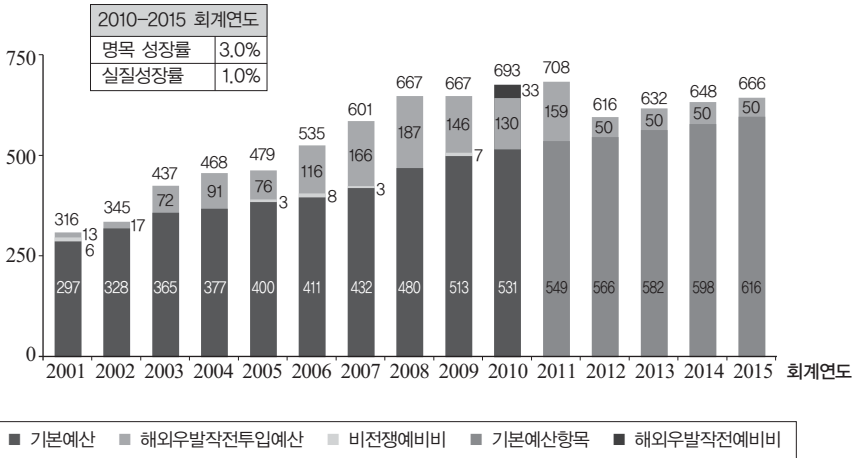
국방예산 감축 압박

미국이 군사적 대응에서 직면한 또 다른 제약변수 중 하나는 국방예산 감축 압박이다. 이라크전쟁과 아프간전쟁의 여파도 있지만 한 나라가 전세계 국방비의 절반 가까이를 지출하는 것은 분명 비정상적 상황이다. 더구나 금융위기 이후 국방예산의 과도한 팽창이 현재처럼 지속되기는 어려우리라는 것이 일반적 전망이다.

국방예산 감축 압박은 2010년 <4개년국방검토보고서>의 작성 과정에서도 논란이 되었다. 이미 2004년 국방전략보고서에서 전투임무 못지 않게 주요 전투행위 종료 후 ‘안정화 작전’(stability operations)에 새롭게 중점이 주어지면서 대규모 예산을 소요하던 일부 프로그램이 중단되거나 조정과정에 들어갔다. 대표적으로는 미사일 방어(Missile Defense: MD) 관련 무기체계, 육군의 미래전투체계, F-22, C-17, 레이저요격체계(Airborne Laser: ABL) 등을 들 수 있다. 그 여파로 군사혁신(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RMA) 편향 사고에서 비전통적 전쟁에 좀 더 비중을 두는 방식으로 균형이 모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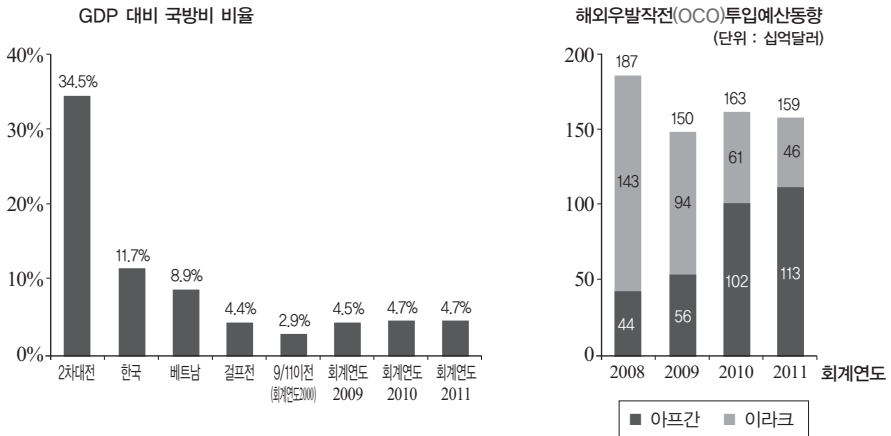
미국의 국방예산은 냉전이 끝난 후 1998년에 3천 615억 달러(2010년 불변가격)로 저점을 지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한 연구에 의하면 1998년 국방비 수준을 기준으로 삼아 2010년까지를 전망할 경우, 1999-2010년 기간 동안 정상적인 전망치보다 대략 2조 달러가 더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Conetta 2010). 또한 9·11 이후 미 국방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나, 실상 기본예산

[그림 3] 2001-2015 회계연도 미 국방예산 추이(단위 : 십억달러)



* 자료, US Department of Defense (2010c).

[그림 4] GDP 대비 국방예산 및 최근 전쟁예산 추이



* 자료, US Department of Defense (2010c).

(Baseline budget)은 운영 및 유지보수(Operation & Maintenance: O&M)에 집중되어 전쟁 예산에 심각한 압박을 받았다. 국방부는 추가예산 혹은 비상 보완(bridge) 재원을 통해 전쟁비용을 조달해왔다. 추가예산은 시간상 제약으로 의회의 심의가 약하고 상한선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국방부가 손쉬운 방법으로 선호한 방식이었다. 의회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 추계로는 이라크전쟁 비용은 상당히 감축될 것이나 아프간 확전과 전비 부족으로 전체적 국방예산 감축 효과는 미미할 전망이다(Fitzgerald and Cordesman 2009).

위 그림들이 보여주듯이 당장은 일반적 기대와 달리 조만간 미국의 국방예산이 획기적으로 줄지는 않을 전망이다. 국방비 기본예산은 오바마 정부에서도 크게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 단, 한 가지 불확실한 변수는 아프간전쟁의 앞날이다. 이라크 전비가 준다고 아프간 전비까지 줄지는 두고 볼 일이다. 아프간 전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응과 한국에 대한 함의

2010년 <4개년국방검토보고서>에서는 미군의 전진주둔과 순환배치를 언급했는데, 이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증대를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주한미군의 지위를 '전진배치'에서 가족과 함께근무하는 '전진주둔'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주한미군의 주둔정상화'(Normalizing the stationing of U.S. forces in ROK)라고 표현했다. 주한미군에 대한 이러한 구상은 앞으로 주한미군을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 투입하는 전략적 유연성 개념을 적극실행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의 한반도 분쟁 대비 및 대북 억지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주한미군의 주둔 성격을 이처럼 전환하는 것은 한국을 사실상 '비전투지역'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전작권 전환 이후 한반도 유사시 한미 간 협력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관해 대비책을 요구한다.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는 핵무기의 역할과 숫자 축소를 지적했는데, 이는 한미 간 확장역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미국 국방부는 향후 2-3년 이내에 핵탄두 장착 토마호크 미사일 퇴역을 완료할 방침이며, 그렇게 되어도 한국, 일본 등 동북아 우방국에 대한 확장역지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한미전략동맹 공고화를 통해 핵우산 확장역지를 강화하는 한편, 센서, 조기탐지, 정밀타격, 크루즈미사일 등 대북 비핵억지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탄도미사일방어계획보고서〉에서는 한국을 탄도미사일방어(BMD) 협력 대상 국가로 분류하고 있는데, 한국의 입장에서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포함한다. 긍정적 측면은 이로 인해 미국의 대한반도 방위공약이 한층 더 가시화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겠고, 반면 한국에게 부담이 될 측면은 미국의 미사일방어(Missile Defense: MD) 정책 전개과정에서 한국이 이에 편입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그 동안 미국은 한국이 MD에 참여해 주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명해왔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 오는 2012년까지 탄도유도탄 작전통제소(AMD-Cell)와 조기경보 레이더,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으로 구성된 ‘한국형 MD체제’를 구축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체제는 전구급 조기경보 레이더와 공중조기경보기, 이지스구축함에 장착된 AN/SPY-1D 레이더, 그리고 지상배치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나 해상배치 SM 미사일 등이 핵심 구성요소이다. 이러한 체제는 글로벌한 스케일에 걸친 미국의 MD에 비해 한반도 전구를 방어한다는 한정된 목적을 지닌 미니 MD라 할 수 있다. 미국은 한국이 어떤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하든 그 체제가 미국의 MD와 상호운용(interoperable) 가능하도록 설계되기를 원한다.

천안함사태 이후 한반도 정세는 위기국면이 심화되는 상황이다. 또한 지금으로부터 2012년까지는 북한의 강성대국 추구, 3대 세습 진행,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굵직한 안보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한미 간 긴밀한 안보협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시기에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을 제대로 읽고 한미 간 전략적 공통분모를 확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천안함사태 처리에 미온적인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에서 보듯이 현재 한국이 지원을 기대할 곳은 미국 외에는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런 만큼 미국 안보전략의 변화가 한반도에 미칠 파장과 영향을 분석하고 대비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한미전략동맹에서의 부담분담(burden-sharing)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대북정책을 둘러싼 미중 갈등과 협력 사이에서의 조율이다. 우선 <4개년국방검토보고서>나 <핵태세검토보고서>, <탄도미사일방어체제보고서>에서 강조되는 지역별 맞춤형 억지체제의 핵심은 결국 해당지역 동맹과 우방이 좀 더 큰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한미 양국은 21세기 전략동맹으로의 변환을 모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작권 전환 이후 동맹의 핵심 논의는 한미 간 분업체계, 즉 동맹의 기능과 비용의 분담 문제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중국의 부상이 미중 간 갈등을 심화시킬 경우 한국의 정치적 군사적 부담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비가 필요하다.

대북정책의 조율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북한 비핵화 정책과 중국의 북한붕괴 방지책이 부딪히는 부분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핵무기 없는세계'를 비확산정책의 근본목표로 설정하고 매우 야심찬 비확산 어젠다를 추구하고 있다. 북한은 이란과 더불어 미국 비확산 정책의 핵심 대상이다. 문제는 천안함사태를 계기로 극명하게 드러났듯이 중국의 현 지도부는 북한을 포기할 의도가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다만, 최근 들어 한반도를 보는 중국의 전략적 사고에서는 분기(分歧)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북한을 둘러싼 중국 내부의 논쟁은 소위 전략과 대 전통주의자들 간의 논쟁

으로 전개되고 있다(International Crisis Group 2009). 전략가들은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대한 고려를 중시하며, 그런 이유로 미국과의 협력적 관계를 중시한다. 이들은 북한에 대해서도 좀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2차 핵실험은 “중국의 뺨을 때린 것”으로 인식한다(Zhu 2009). 중국 외교부는 북한에 비판적인 이들의 입장에 대체로 동조하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전통주의자들은 서구세계의 전략적 의도를 근본적으로 불신하며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지분을 제로섬(zero-sum) 상황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중국의 국익에 가장 심각한 위협은 당연히 미국이고, 북중관계는 여전히 소위 ‘순망치한’(唇亡齒寒)의 관계이다. 천안함 사태 이후 중국의 북한 감싸기가 확실해진 이상 한국 입장에서는 한-미-중 네트워크 속에서 북한문제에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

결론

글로벌 차원에서 진행되는 여러 변화들 가운데 두드러진 것은 세계금융위기 이후 가속화되는 국제질서의 변화와 군사안보 위협 형태의 변화, 그리고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재설정되는 미중관계의 전개 등을 꼽을 수 있다. 미국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변환(Transformation)을 강조했다면, 오바마 시대는 재균형을 강조하면서 일방주의 외교로부터의 차별화, 외교의 군사화를 탈피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의 자의적 선택이기도 하지만 미국이 처한 글로벌 환경의 변화로 인해 불가피한 측면도 크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여전히 부진한 국내경제, 갈수록 하락하는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그리고 2010년 중간선거에서의 패배로 인한 부담이 변화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의 추세는 미국이 2010년 〈국가안보전략〉에서 밝혔듯이 국내에서의 ‘추스리기’ (building at home)를 얼마나 빨리 완수하여 밖에서의 ‘만들어가기’ (shaping abroad)에 자신감을 회복하는가에 달려 있다.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현재 국내 문제가 더 중요하고, 금융위기 이후 ‘더블딕’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기에 금융위기의 출구를 찾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할지 모른다. 이에 비해 중국은 미진한 세계화 덕에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에 비해 금융위기의 충격을 상대적으로 덜 받았고, 그 여세를 몰아 경제성장과 군사현대화를 지속할 것이다. 또한 미국이 국내정치적 제약 때문에 군사비 증액에 한계가 있는 반면, 중국은 군비감축 압박이 존재한다는 조짐조차 없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추세를 고려하여 동북아에서 갈수록 커지는 중국의 무게를 감내하기 위하여 새로운 비전을 찾아야 할 때다.

■ 참고문헌

- 김치욱. 2010. “글로벌 스탠다드의 형성과 미국의 네트워크 권력 : 국제투자협정을 중심으로”. <세종정책연구> 6, 2.
- 이상현. 2010. “오바마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정세와 정책> 7월.
- 이종판. 2010. “중국의 제1, 제2 열도선 전략”. <조선일보> 9월 25일.
- <중앙일보>. 2010. “중국, 스텔스 잠수함 만들었다”. 10월 4일.
- Burrows, Mathew J. and Jennifer Harris. 2009. “Revisiting the Future: Geopolitical Effects of the Financial Crisis.” *The Washington Quarterly* April.
- Conetta, Carl. 2010. “An Undisciplined Defense: Understanding the \$2 Trillion Surge in U.S. Defense Spending.” Project on Defense Alternatives, *Briefing Report* 20, January 18.
- Cossa, Ralph A. 2010. “China’s Expanding ‘Coastal Waters’.” Pacific Forum CSIS, *PacNet* 37, August 23.
- Eaglen, Mackenzie and Jon Rodeback. 2010. “Submarine Arms Race in the Pacific: The Chinese Challenge to U.S. Undersea Supremacy.” The Heritage Foundation, *Backgrounder* 2367 February 2.
- Erickson, Andrew S. 2010. “‘China Watch’ Ballistic trajectory: China develops new anti-ship missile.” *Jane’s Intelligence Review*, February.
- Frost, Ellen L., James J. Przystup, and Phillip C. Saunders. 2008. “China’s Rising Influence in Asia: Implications for U.S. Policy.”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udies, National Defense University, *Strategic Forum* 231, April.
- Goldman Sachs. 2007. *Goldman Sachs Paper* 170, July.
- Grewal, David Singh. 2003. “Network Power and Globalization.” *Ethics and International Affairs* 17, 2.
- _____. 2005. “Network Power and Global Standardization: The Controversy over the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Metaphylosophy* 36, Jan/Feb.
- _____. 2008. *Network Power: The Social Dynamics of Globaliza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Haas, Richard N. 2008. “The Age of Nonpolarity: What Will Follow U.S. Dominance.” *Foreign Affairs* 87, 3.

- Hachigian, Nina, Michael Schiffer, and Winny Chen. 2008. "A Global Imperative: A Progressive Approach to U.S.-China Relations in the 21st Century."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August.
- Hoffman, Frank G. 2009. "Hybrid Threats: Reconceptualizing the Evolving Character of Modern Conflict." *Strategic Forum* 240, April.
- Hu Jintao. 2008. "Speech at the Meeting Marking the 30th Anniversary of Reform and Opening Up." Hu Jintao, General Secretary of the CPC Central Committee. December 18.
- Fitzgerald, Erin K. and Anthony H. Cordesman. 2009. "The 2010 Quadrennial Defense Review: A+, F, or Dead on Arrival?"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August 27.
- International Crisis Group. 2009. "Shades of Red: China's Debate over North Korea." *Asia Report* 179, November 2.
- Joffe, Josef. 2009. "The Default Power: The False Prophecy of America's Decline." *Foreign Affairs* 88, 5.
- Kaplan, Robert D. 2010. "The Geography of Chinese Power." *Foreign Affairs* 89, 3.
- Keohane, Robert O. 2005.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nom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Classic Editions).
- Kindleberger, Charles P. 1973. *The World in Depression, 1929-1939*.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Krauthammer, Charles. 1990/91. "The Unipolar Moment." *Foreign Affairs* 70, 1.
- Slaughter, Anne-Marie. 2009. "America's Edge: Power in the Networked Century." *Foreign Affairs* 88, 1.
- Zakaria, Fareed. 2008. *The Post-American World*. New York: W.W. Norton and Company.
- Flournoy, Michele. 2010. "The Contested Commons". Defense.gov
<http://www.defense.gov/qdr/flournoy-article.html>(검색일 : 2010.2.2).
- Gates, Robert M. 2010. "A Balanced Strategy: Reprogramming the Pentagon for a New Age". Defense.gov
<http://www.defense.gov/qdr/gates-article.html>(검색일 : 2010.2.2).
- Obama, Barack. 2009. "Remarks by President Barack Obama at Suntory Hall". Suntory Hall, Tokyo, Japan, November 14 .
<http://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remarks-president-barack-obama-suntory-hall>(검색일 : 2010.9.25).

The White House. 2010. *National Security Strategy*, May.

http://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rss_viewer/national_security_strategy.pdf.

U.S. Department of Defense. 2010a. "Annual Report to Congress -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0".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http://www.defense.gov/pubs/pdfs/2010_CMPR_Final.pdf(검색일 : 2010.8.17).

_____. 2010b.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February".

http://www.defense.gov/qdr/images/QDR_as_of_12Feb10_1000.pdf

_____. 2010c. Office of the Under Secretary of Defense. "Fiscal Year 2011 Budget Request". (Briefing slides) February.

http://comptroller.defense.gov/defbudget/fy2011/fy2011_BudgetBriefing.pdf.

U.S.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2008. "Global Trends 2025: A Transformed World November".

http://www.dni.gov/nic/PDF_2025/2025_Global_Trends_Final_Report.pdf(검색일 : 2009.5.1).

Zhu Feng. 2009. "North Korea Nuclear Test and Cornered China". *PacNet*, Pacific Forum CSIS, 1 June.

<http://csis.org/files/publication/pac0941.pdf>(검색일 : 2010.9.25).

Zoellick, Robert B. 2005. "Whither China: From Membership to Responsibility?" Deputy Secretary of State, Remarks to National Committee on U.S.-China Relations, New York City, September 21, 2005.

<http://www.state.gov/s/d/former/zoellick/rem/53682.htm>.